

한라포커스 마지막 기로 놓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의회 동의안 무산시 2년간 개발 제한

이번 임시회 마지노선... 불발시 공원 용도 해제 시 "도시공원 효력 상실 대비 개발제한구역 지정"

제주시가 이번 임시회 때도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두 공원에서의 개발행위를 2년간 원천 차단할 계획인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럴 경우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오는 8월 공원 용도에서 해제되도 당분간 개발이 안돼 난개발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토지주 입장에서는 또다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반발이 불가피하다.

▶마지막 기로=제주시 오등봉공원(76만4863㎡)과 중부공원(21만4200㎡)은 지난 200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이름만 공원일 뿐 대부분 원형 그대로의 숲으로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현재 결정을 토대로 국토계획법(현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도시공원 일몰제'를 도입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오는 8월 11일 공원 효력을 상실한다. 다급해진 제주시는 두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민간사업자 2곳과 함께 2025년까지 오등봉공원 부지(76만4863㎡) 중 9만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중부공원 부지(21만4200㎡) 중 4만4944㎡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각각 지을 계획이다.

현재 두 사업은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6월 1일 제39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4월 임시회 때 심사 보류한 동의안을 다시 심사한다. 만약 이번 임시회 때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두 사업은 사실상 모두 무산되고, 두 공원도 효력을 잃는다.

▶또다시 개발 뉘이나=시는 환경영

영향평가 동의안 처리가 이번에도 무산되면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개발제한구역으로 2년 간 지정할 것을 제주시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제주시에서 효력을 상실한 도시공원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적은 없었다. 이런 시의 계획은 정부가 수립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지난해 4

월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공원 해제로 인한 난개발이 예상될 때 해당 부지를 보전녹지지역이나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등 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보전녹지와 경관지구에선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고, 2-3층 이내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

또 지침은 이런 관리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단 개발 제한 조치는 주민 열람과 도시계획 심의 기간을 고려해 반드시 도시공원 효력 상실 60일

전에 하도록 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8월 11일 공원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개발행위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적어도 6월 11일 이전에 이런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 공원 효력을 상실해도 당분간 개발이 불가능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 토지주들이 또다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보전녹지·경관지구에서도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더 큰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오는 8월 11일을 기해 중부공원과 함께 공원 효력 상실을 앞둔 오등봉공원.

사진=한리일보 DB

가정용 상하수도 누진제 폐지·요금 인상

도 물가대책위 전체회의... 요금체계 개선 등 결정

속보=제주시가 수십년 간 유지한 상하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본보 3월 31일자 3면 보도)하고 상수도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는

5월 25일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도 상하수도본부가 제출한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인상 조정안을 심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물가대책위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제를 가정용에 한해 폐지해 상수도의 경우 t당 520원, 하수도의 경우 t당 550원으로 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2면에 계속

5~6월 백신 접종 예약률 60% 그쳐 미루면 10월 이후에나... 당국, 적극 동참 당부

고령층 대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신청 마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도 방역당국이 적극적인 사전 예약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의 5-6월 접종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대상자들의 사전예약률이 25일 0시 기준 60.3%로 집계됐다.

5-6월 접종 대상자는 어르신인 경우 만 60-64세, 만 65-69세, 만 70-74세이며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어린이집 교사 등이다.

도내 60세 이상-74세 미만 10만 8806명 중 사전예약에 참여한 인원은 6만4695명(59.5%)으로, 전국 평균 58.2%를 다소 웃돌고 있다.

65-74세 대상 백신 접종은 2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시작된다. 60-64세는 6월 7일부터 접종한다. 75세 이상 화이자와 달리 74세

이하는 도내 위탁 의료기관 145곳에서 접종한다.

접종 예약은 휴대전화나 온라인(http://ncvr.kdca.go.kr)으로 가능하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접종 장소와 날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자녀나 보호자, 대리인이 예약할 수도 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콜센터(1339)나 제주도(064-710-2922-4)로 연락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예방접종 예약과 안내를 지원하고 있다. 방문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6월까지 접종 순서를 놓칠 경우 하반기 모든 국민의 1차 접종이 끝나고 10월 이후(4분기)에 접종이 가능하다. 강다혜기자

운동부 집단감염 '변이 바이러스' 확인

도내 확진자 중 30명 감염... 강한 전파력 등 '비상'

이달 제주지역 4차 대유행을 불러일으킨 대학교 운동부 관련 확진자 중 일부가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4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유전자 분석 결과 30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감염자 30명 가운데 해외 입도객 2명을 제외한 28명이 제주지역 내에서 n차 감염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중 25명은 현재 도내에 거주 중이며 5명은 현재 타지역 거주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러스 유형별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29명,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명 등이다.

특히 이달 초 제주국제대학교 레슬링부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으로 현재까지 66명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이들 중 20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제주 입도객, 타지역 접촉자 등 10명의 개별 사례도 파악됐다.

앞서 도 방역당국은 국제대 레슬링부 집단감염의 '지표환자'(처음 발견된 환자)의 바이러스 전파력이 여태까지 도내에서 경험했던 감염원과는 달리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데다 격리기간이 일반 바이러스보다 길고, 격리 해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도내 의료체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역에선 지난 2월 초 هنگ리에서 국내로 들어온 후 항공편을 통해 입도한 525번 확진자가 도내 첫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기록됐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965
 25일 18시 기준



제13회 사려니숲길 에코힐링 체험행사를 축하합니다.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전력 제주본부